

[요약]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변경

- (개요) 축사의 계획적 입지와 축산업의 지속 발전 위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
- '19년부터 노후·난립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 하는데 필요한 전기·도로 등의 기반조성 및 관제센터 신축 비용 지원
 - * 이를 통해 ①생산비 절감, ②사양관리 등 경쟁력 강화, ③악취·탄소저감, ④가축 방역 강화, ⑤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**축산업 지속 가능성** 제고에 기여
 - 다만, 사업 대상지 인근주민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인·허가 지연 으로 해당 사업이 중단·포기되고 관련 예산 이월·불용 등 사업 차질
- (개선) 농촌 토지·공간 이용현황·계획 등을 반영해 사업시행지침 개선
- ①조성규모 다양화, ②축사가 밀집한 현 단지의 재개발 허용, ③조성·운영 주체에 지자체를 명시하고 스마트축사의 청년농 장기 임대 허용 등

| 구분 | 현행 | 개선 | 기대효과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조성 규모 완화 | 15ha 내외 | 3ha~30ha 내외 | 지역 토지·공간 이용현황 및 계획 반영으로 맞춤형 조성 지원 |
| | 정액 지원 * 면적 무관, 6,250백만원 지원 | 단가(조성면적) 지원 * ha당 350백만원 | 조성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해 형평성 제고 |
| 대상지역 요건 완화 | 신규부지를 확보해 기존 노후 축사 이전 | 축사 밀집한 현 부지 활용 스마트축단지 조성 허용 | 기존부지 활용으로 민원감소,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단축 |
| 사후관리 | 별도 관리체계나 제도가 부재 |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 | 지속적 사후관리와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|
| 조성 및 운영 주체 | 시·군·구 | 시·도 허용 |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한 광역 단지 조성으로 사군간 갈등 해소 |
| | 축산농가 등으로 구 성된 법인 또는 조합 | 시·군·구 또는 시·도의 직접 운영 허용 | 청년농 장기 임대허용으로 신규농 진입 촉진 지역경제 활력 창출 |

- (향후일정) 사업대상자 공모('23.11), 제안서 접수('24.1)
-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자 선정('24.2), 조성지원('24~'27년)